

군과 언론, 국가위기관리의 동반자인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간지 논설위원과 국방부 관계자 등 70여 명을 초청해 양평 블루비스타에서 ‘국가위기관리와 언론의 기능’을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철우 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미국의 전쟁보도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발제를 했고, 박헌채 언론중재위원(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송종길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정기세미나의 발제문과 지정토론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13 정기세미나 현장중계’ 코너에서는 지면관계 상 개회사, 발제 요약, 지정토론 요약, 종합토론, 총평 순으로 정리했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록하고자 종합토론의 내용은 요약 없이 실는다.

개회사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파란 강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밭, 앙상한 나뭇가지의 쓸쓸한 모습, 먼 산 위에 하얗게 쌓여있는 눈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것도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포성이 울리거나 총탄이 쏟아지면, 아름다운 경치라 할지라도 즐기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위기, 가령 전쟁의 위협이 그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 중 하나는 무기입니다. 탱크나 비행기 같은 무기도 있지만, 우리는 이외에 언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본질이 무기는 아니나, 위기상황에서는 언론이 무기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은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언론은 반전 여론을 형성하거나 군사 기밀을 누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의 사기를 높이고, 일치된 단결력을 높이며, 전쟁 수행에서의 여러 문제를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은 국가위기 시에 군사적 승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군사 측면에서의 승리만 뜻하진 않습니다. 현대에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승리했다라도 무자비한 인적 자원의 낭비가 있었다면 그것을 승리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기 시에 지켜야 하는 인간적인 측면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상을 막고, 문화재를 파괴로부터 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언론이 그 능력을 발휘해야하는 측면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단지 현대에 와서 커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인간적인 측면의 보호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언론이 국가위기 시에 가져야 하는 기능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갈등의 상황을 조성하는 가운데, 이 갈등을 어떻게 순조롭게 조율하는가는 그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오늘 토론이 언론이 국가위기 시에 가져야 하는 갈등의 순간에서 어떻게 기능해야하는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좋은 토론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준

(사회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권성 위원장님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는 김철우 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시고, 박현채 위원님과 송종길 교수님이 지정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 후에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우 전문연구위원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주제 발표



김철우

(발제자, 국방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현재 한·중·일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국가안보위기 시에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평도 포격 때도 미국에서는 곧 전쟁이 날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2차 공격이 시작된다고 알려지자 외신기자들은 방독면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대피했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은 피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기자들은 어떠한 안전 장비도 없이 연평도에서 위기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언론·국방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국가안보위기 시에 언론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박 모 신부가 연평도 포격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군사작전 및 안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따라서 이번 발제에서는 오늘날 비정기적 국지 도발, 테러 등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과연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미국의 전쟁보도 시스템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군과 언론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사실 전쟁은 언론에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신문사들은 매우 크게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이 발전하고 언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진 것은 군의 영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부터 그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 초기에 맥아더 장군은 언론 검열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언론 스스로가 보도에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말기에 중국 군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 대한 검열이 시작됐습니다. 언론과 군의 갈등이 가장 커진 것은 베트남전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취재를 자유롭게 허용하면 군에 우호적인 보도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언론들이 전쟁의 비참함을 경쟁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면서 군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었고, 미국은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의 미군은 지금까지도 여론 전쟁, TV 전쟁에서 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미군은 언론을 기피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군과 언론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베트남전 패전 이후 미군 수뇌부는 언론을 기피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기자들을 최대한 전투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언론계의 반발이 심화되자 미국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펜타곤의 주도하에 'Hoffman 위원회'를 구성했고 언론의 비난을 감안한 중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AP통신 펜타곤 기자로 22년간 일하고 국방부 부공보차관보(deputy ASD/PA)까지 지내 양 집단의 특성을 잘 알

고 있는 프레드 호프만(Fred Hoffman)은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미군의 대언론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90년대 들어와서 80년대와는 다르게 치밀한 언론관리 작전을 전개합니다. 공보작전 차원에서 작전현장의 동영상을 제작해 언론에 전했습니다. 군이 언론인을 에스콰하는 취재협조 방식도 효과를 봤습니다. 또한 24시간 생중계 뉴스 채널을 통해 언론과의 인터뷰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언론관리 작전을 수행한 걸프전은 군과 언론의 관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미군은 소말리아 파병, 98년도 코소보 전쟁 등에서도 심리전 차원에서 언론을 이용합니다.

9.11 테러 보도는 미군에게 전쟁의 정당성을 제공해줬습니다. 만일 테러가 밤에 일어났다면 테러범들은 세상을 다 가졌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날씨 좋은 낮에 가장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며 미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언론은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응징차원의 군사작전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언론은 미군의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 공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작전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입니다.

이라크 공격에서는 직접 동행취재(Embedding system)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기자들을 현장에 접근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미국 장병의 눈으로 전쟁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은 모두 미디어에서 해설가로서 동행하며 군의 입장을 지원하고 옹호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라크 공격 취재는 고도의 선전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공격에 관한 언론보도는 심층보도가 부족했고 보도화면이 전자게임과 같은 그래픽 형식으로 편집되어 문

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직접 동행취재를 통해 군과 언론이 오랜 갈등을 끝내고 좋은 관계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라크 공격 이후 미군은 미디어 환경변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효율성 증진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보시스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에 ‘국방미디어활동본부’(Defense Media Activity)를 새로 조직하여 그동안 국방부 및 각 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각종 미디어 활동을 통합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사건을 보도하는 것도 처참하게 살해된 모습을 보도하지 않고 고도의 기획 아래 대통령과 참모진이 협상하는 모습을 보도함으로써 자칫 비난여론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공보시스템의 힘으로 극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연평도 사건 당시 우리 군은 사태발생 초기의 메시지 관리, 군의 즉응태세 적정성 논란, 대언론 발표 일관성 시비 등의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은 대한민국 영토가 직접 적의 포격을 당하는 상황 하에서도 우리 군의 대응 잘못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TV 방송이 우리 군의 취약점에 대한 그래픽 해설까지 곁들여 실시간 스포츠 중계하듯 하는 모습은 언론계 내부에서조차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위기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 취재보도 준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기자협회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이후 ‘국가안보위기 시 취재보도 기준’을 만들어 국방부장관과 기자협회장이 사인하여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군은 취재보도를 적극 지원하고 언론은 군 작전현장의 작전보안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과 군의 조화를 위해서, 군의 미디어 교육 및 언론의 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상호 교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경우 군

인의 언론 특성 이해력을 제고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장성들은 현장에서 작전지휘만 했기에 언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주관으로 검토, 추진 중인 ‘국방미디어센터’ 신설을 조기에 달성하여 이를 ‘군과 언론’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방미디어센터’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언론인의 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언론과 군의 협력 관계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의 주역들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군과 언론의 동반자 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준

(사회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김철우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군과 언론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발제를 들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호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박현채 서울제5중재부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고, 이어 송종길 교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겠습니다.

지정토론



박현재

(지정토론자, 서울제5중재부 중재위원)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듯이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보도를 둘러싸고 군과 언론이 갈등을 빚어왔고 양 집단의 여망을 수용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 6.25 전쟁을 제외하고는 전쟁 당사자가 되어 본 적이 없는 우리 언론과 정부에게는 미국의 다양한 시도가 참고해야 할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군과 언론은 그 특성상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둘 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군은 기밀보호, 즉 안보라는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에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개주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국가이익과 진실보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숙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나 고도의 국가안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이익과 진실 보도 문제가 충돌하게 될 경우 우선순위와 한계를 규정짓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익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명확하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단순히 국익

신장을 위해 발발했느냐, 아니면 자유와 민주정의를 위해 발발했느냐에 따라 언론의 전쟁보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 당사국인지 아니면 제3국인지 등, 해당 국가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는 더욱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가 국익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불가침이라거나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 통설로 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5년 5월 21일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포탄의 비극’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영국군이 사용하는 포탄에 불발탄이 많아서 독일군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진실을 담고 있었으나 다른 언론사들은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영국군 지휘부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왜곡보도”라며 기사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군 당국의 해명성 발표를 접한 국민들은 데일리 메일이 이적행위를 했다면서 불매운동과 광고 게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50세였던 노스클리프(Northcliff) 데일리 메일 사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불리한 전황에 대한 진실보도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 신문보도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들의 요구로 새 연립내각이 들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훗날, 패전한 독일 황제는 “우리는 데일리 메일 때문에 패했다. 진실을 알리는 펜의 힘,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사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진실보도가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 보도는 언론의 책임과 사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본연의 사명과 함께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한다는 상업적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간 경쟁이 치열하고 특종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도처에 특종감이 널려 있는 전쟁만큼 미

디어에 호재는 없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 전쟁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는 시대입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 때는 취재에서 보도까지 48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전황의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리얼하게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언론을 선정주의에 빠저들게 해 국익을 해칠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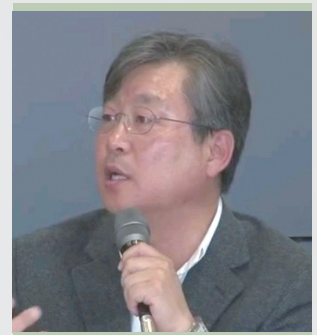
김 연구위원의 논문에서 거론됐듯이 언론의 선정주의는 적에 의해 심리전으로 역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모든 외신기자를 추방하면서도 유일하게 CNN기자인 잔류시킴으로써 다국적군에 의한 바그다드 지하 대피호 폭파와 무차별 공습, 오폭 등을 그대로 방송하게 하여 반전여론을 유도했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타당하더라도 전쟁으로 불가피하게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반전론자나 평화론자에게는 커다란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된 보도와 지나치게 선정적인 과장·왜곡보도가 얼마만큼 국익에 해를 끼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방해가 되는 지를 언론인 스스로 곰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많은 국민이 갈등하고 있을 때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에 대한 왜곡 없이 진실만을 보도해야만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군도 안보위기가 발생한 작전현장 등에 대한 취재보도진의 과도한 통제와 뒤늦은 사실 확인 및 해명이 불신과 추측보도를 유발해 비판과 오보를 생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미디어는 전쟁의 뉴스를 보도하는 수단인 아니라 전쟁 그 자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미디어는 무기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쟁 수행기간 내내 여

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최고의 무기는 여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여론 지지 마저 없을 경우 제 아무리 강한 경제력과 우수한 무기체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인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군이 공감대를 형성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군과 언론 중에 누가 국익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에게 맡기고 상대 집단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송종길

(지정토론자,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경기대학교 송종길 교수입니다. 세계의 어느 언론이 국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가장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미국조차 국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

랍 세계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알 자지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랍 민족의 이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은 언론의 자유, 아주 이론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는지 논란이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취재보도의 자유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인의 시각과 국익,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제한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의 충돌은 본질적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전 대학 수업 중에 연평도 포격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수업을 끝까지 계속했고, 국민들도, 생중계하는 방송국도 모두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직접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사포가 날아오고, 포탄이 날아오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며, 북한과 적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전쟁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전쟁보도 전문기자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위기 상황, 전쟁뿐만 아닌 대규모의 재앙 상황에서 기자들이 허둥댄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나 신문 기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6.25 이후로 전쟁취재 기회가 없었고, 미국 중심의 해외 전쟁에 직접 들어가 취재한 기자도 거의 없으며, 동포들 인터뷰, 통신사에서 전해주는 영상의 반복적 재생, 스케치 등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전쟁에는 또 다른 기자가 나가고 하다 보니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한계입니다. 군 당국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전에는 언론과 관련해 대응을 한단던가 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 역시도 본질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작전 수행을 위해 안보를 추구해야 한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준비가 부족합니

다. 2012년 5월 '국가안보위기 시 취재보도 기준'에 대해 국방부와 한국기자협회가 합의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전쟁의 다양한 상황, 다양한 대응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해외 사례는 매우 구체적 기준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기자와 군 당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갈등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이지 않은 보도 기준만 가지고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또한 전쟁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취재 방식에 대해서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의 경우, 남북이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통해 언제든지 터질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의 전쟁보도는 거의 스포츠 중계 수준입니다. 영상자료가 없으면 오락 게임과 같은 그래픽, 외신이 보내준 영상의 반복 등의 보도양태를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전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스포츠 관전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전쟁이 전혀 자신과 무관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함께 보도를 하는 방식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언론 미디어 환경이 취재보도 기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만여 명의 취재 기자들이 전쟁이 나면 모두가 다 올 텐데 과연 통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협회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군 당국, 전문가, 당사자 등의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언론보다는 군이 당사자로서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본질적으로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을 가장 높게 여긴다는 점에서 연평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보도지침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국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언론도 취재보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좀 더 구체화된 보도지침과 현실적인 기자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언론사의 보도준칙, 가이드라인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 기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주려는 자세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방부가 가이드라인만 던져두고 언론에 '따라오라'는 식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재앙은 진실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진실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것은 사회에 큰 타격이 됩니다. 유언비어의 확산은 바람직한 형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군이 전쟁보도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언론사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채워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문기자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내부적으로 교육과 단속을 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동의 국익이라는 점에서 언론사의 협조도 필수적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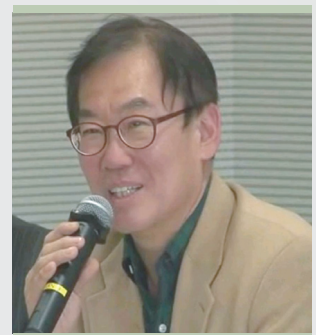
손영준

(사회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감사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니 토론할 내용이 많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연평도 포격이 2위에서 3위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1위는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니스프리'가 전국적 세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안보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지정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가위기관리와 언론의 기능에 대한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난상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모아하겠습니다.

.....

종합토론



김정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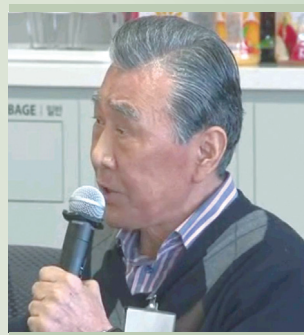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전쟁과 언론보도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전은 미국 언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언론보도는 철저히 애국보도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전 이후 ‘국가의 이익’과 ‘전쟁의 승리’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언론의 애국보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진보지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하여 상충적인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국방부의 전쟁 기밀문서를 보도한 것에 대해 뉴욕대법원이 뉴욕타임즈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전쟁 특파원 역사상 베트남전이 가장 편했다고 할 만큼 베트남전 보도는 그 자체가 애국보도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이익을 바라봄에 있어 정부와 국민의 시각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불일치하게 된다면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전방과 후방의 의견 일치입니다. 전·후방의 의견이 다를 경우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맥이 빠지고 전쟁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인, 군인, 특히 군 홍보담당자가 전쟁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전쟁을 수행할 경우 반작용이 클 것을 예상하고 여론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내 여론이든 국제 여론이든 많은 시간을 들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극한적인 상황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정치인부터 군 홍보담당자들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군 홍보 시스템으로는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군 당국이 여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국가 위기의 상황을 이골

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명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김철우 연구위원의 발제문에서 미국은 베트남전의 패배 요인으로 언론의 영향을 꼽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로써 미국 정부와 군, 언론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베트남의 선제공격을 근거로 미국이 핵 항공모함, 구축함, 전투함, 함정 등으로 구성된 핵 함모 전담을 통킨만에 투입해 베트남을 초토화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를 빌미로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으나, 뉴욕타임즈가 군사계획 전문을 입수하여 사전에 보도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펜타곤 페이퍼 사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희생될 것이라며 통킨만 침공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킨만 침공계획은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기밀문서를 입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언론과 군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당시 미군 당국은 Inner Circle(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NBC, CBS, PBS 등 미국 주요 6개 언론사)에 대하여 중요한 군사 계획이 있기 전 출입기자를 극비리에 불러서 설명을 하며 엠바고를 걸고는 했으나 통킨만 침공계획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침공사건입니다. 전 세계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으나 이스라엘은 전광석화 같은 공격으로 6일 만에 이집트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 신문사는 사전에 침공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보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와 정 반대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두 신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언론이 국가 안보상의 중대한 상황에서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우 (발제자, 국방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펜타곤 페이퍼 사건은 국가 안보의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 논의해 볼만한 사례입니다. 이익비교형량의 법칙에 의해 군사기밀을 보도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기밀의 판단기준으로 형식비, 실질비, 비공지성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사실상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군사기밀을 극비리에 입수해 공개여부를 고민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으나, 판단의 주체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개 이후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종연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우리 언론계에서는 보통 선임기자가 데스크를 마치고 보직을 맡기에 마땅치 않을 때 군사전문기자, 행정전문기자 등 전문기자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언론사들이 전문기자를 임명할 때 회사 편의에서 하지 말고, 출입처에 인원을 좀 더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출입기자가 최대 8진까지 있지만 국방부는 한두 명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국방부 출입자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언론사측에서 그렇다면 국방부에서만만큼은 사주를 만나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군사전문기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출입한 기자에게 전문기자 자격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계획담당)

현재 국방부 등 각 군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열린 마음으로 언론을 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이 아닌 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이 언론에 다가가려는 노력의 예를 들자면 국방부는 매일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리핑할 내용이 없을지라도 기자들의 질문이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입기자들이 군 공보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가치, 국익, 군사작전, 기밀보호 등을 고려하다 보니 제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안보위 기시 취재보도 기준을 만들었고 어떻게 이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언론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취합하여 군과 언론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하기 시작한 뉴욕타임즈 1971년 6월 13일자 1면 (출처 :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www2.gwu.edu])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거와 달리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 지휘관, 장교, 특히 공보 장교들이 언론을 이해하고 언론을 통해 군사작전, 평상시의 공보작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Media Training 학교를 만들기 위해 중기계획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원에서 언론의 입장과 군사적 관점을 수용하여 국가이익을 위해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군 공보 시스템, 위기관리 시스템 등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SBS 논설위원실장)

제가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이라크 전쟁, 레바논 전쟁을 직접 취재하면서 겪은 외국과 한국의 군사 공보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의 경험 중에 이스라엘이 취재에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취재하러 왔다고 하니 가장 먼저 공보실로 안내해 프레스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카드가 있으면 최전방이 아닌 이상 어느 곳이나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쟁 시 언론보도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들어가기 전에 암만에서부터 프레스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두 차례씩 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취재해야겠다는 조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때에는 취재기자가 30명이었는데도 현지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은 그 전날 이미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정보를 찾아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군사기밀 논쟁은 또 다시 심해졌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취재에 제한은 필요하겠습니다. 그

러나 제한은 프레스 카드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처럼 젊은 기자들이 용기와 무모한 배짱으로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군에서 취재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군에서 취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철
(서울신문 심의위원)

6.25 전쟁 이후 첫 교전은 2000년 연평해전일 것입니다. 당시 저는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었는데, 첫 교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국방부 브리핑이 아니라 현장 기자들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국방부 기자실에서 언제쯤 발표가 이뤄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브리핑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당시 남북은 발표는 하지 않으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경찰 출입 1~2년차의 기자들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아침 9시쯤 취재기자로부터 ‘총소리가 들립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

다. 발표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되었는데 아직도 대변인실은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보도는 아니더라도 방송 자막으로 교전 사실을 내보내도 될 것 같다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13년 전이 이러한데 지금이라고 적시에 대변인실에서 팩트를 말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듭니다. 일일브리핑은 제가 있을 때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매일 브리핑을 해도 그것을 기사로 쓰는 기자는 드물 것입니다. 군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과 언론이 보도하고자 하는 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확실하게 팩트를 알릴 수 있도록 군 당국에서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에 군 공보장교들이 많이 오셔서 언론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의 상식과 일반 사회의 상식이 일치되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연구관)

언론과 국가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국가안보가 언론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됐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강릉 침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합참공보실에서 그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제도나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점차 발전하여 오늘날 국방부에서는 오픈되고 투명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과 언론은 동반자 관계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추상적인 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이뤄가기 위해 제도, 규범,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언론과 자주 접촉하는 기회를 갖고 제도화된 기구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먼저 논설위원, 사주 등과 군이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상설화·전문화된 협의체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릉 침수함 침투사건 때 국방부는 군사작전이 언론을 통해 다 누출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년에 보도준칙을 만들어 군과 언론이 합의한 것은 의미

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준칙의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계와 국방부에서 규정을 구체화·세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언론계에서도 국방 관련 보도인력을 양성하고, 보도 안내서, 윤리 강령 등을 교육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대영
(연합뉴스 논설위원)

가끔 언론에 군사기밀로 보이는, 북한이 알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기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언론에 군사기밀을 왜 보도했냐는 식의 불멘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군사정보를 기지만 보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처에서 군사관련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국방부에서는 얼마나 빨리 이 사실을 파악하고 언론사에 보도 자체를 요청하는지,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진우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계획담당)

팩트인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해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산하 조직도까지 보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국정감사에서 모 의원의 질의 자료로부터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긴급히 출입기자, 각 언론사, 국회 기자실까지 연락을 취해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우려가 있으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인터넷기자 등 국방부 출입기자만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기사를 막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일반 관료들은 오히려 공보담당 장교들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보안 담당부서 등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조사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공보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작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많았습니다. 국방부 공보장교들은 근무교대를 편성해 합동참모본부 통제실에서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이 되면 즉시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두 달이나 대기상태를 지속하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력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출입기자가 자주 바뀌는 것이 저희에게도 어려움입니다. 교육하고 이해를 시켜 놓으면 곧 다른 기자로 바뀝니다. 조속히 전문기자제도가 만들어져서 보다 날카로운 분석으로 국민들에게 보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전통 언론 시대와 SNS 시대의 군과 언론의 관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만이 팩트를 보도했으나 지금은 개인도 SNS를 통해 사실 관계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SNS 시대에는 팩트에 대한 보도보다 팩트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의 진실여부는 언론의 자체적인 검증과 군의 발표에 의해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같은 언론인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팩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계속해서 쌓이면 편향된 정보가 제공되어 오히려 팩트 그 자체보다 더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올바른 해석을 위한 관점이며 이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군과 언론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충신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문기자제도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 그나마 언론에서 전문성이 가장 많이 유지되는 곳이 국방부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군만큼 전문적인 홍보 시스템을 갖춘 조직도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 천안함 사태인데, 이 사건으로 군과 언론 모두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양 기관은 가장 전문성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가 국민의 편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었습니다.

당시 천안함 사태에서 언론보도의 혼란은 군 수뇌부가 판단을 하지 못해 홍보의 전략적 오류와 모순이 생겼고 이로 인해 언론대응의 타이밍을 놓쳐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변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군의 책임자들이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디어에 대해 워낙 군 장성들이 거처야 하는 교육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교육시스템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안함과 연평도 사례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자료

가 될 텐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3년 전의 미흡함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안함 사태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당시 왜 유언비어가 형성되었는지,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서 전략적인 홍보 전략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토론과 연구논문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학계, 언론계, 국방부 관계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홍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철우
(발제자, 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군과 언론의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갖고,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조화시키고 해결해 나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과 언론 간의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로서 영국의 국가언론협력위원회를 벤치마킹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상호협력력을 이루어나가는 언론국방홍보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영준

(사회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오늘날 한국 사회는 ‘소통의 위기’라고 합니다. 소통이 불통되면 국민들의 울화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과 언론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주최해 주신 권성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 들겠습니다.

총평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오늘의 토론을 들으면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군과 언론은 서로 윈-윈하며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대개 승리하여 오늘과 같은 초강대국이 되었고, 언론도 이에 따라 세계 제일의 언론이 된 것입니다. 후일에 미국이 쇠퇴기에 접어들면 언론 또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공한 나라의 군과 언론의 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정부나 국익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군과 언론은 국익을 단기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전술적이 아닌

전략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 국익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군에 관한 보도에 있어 무엇이 비밀인가가 항상 쟁점이 될 것입니다. 군에서는 비밀이라고, 언론에서는 비밀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비밀은 전쟁의 상대가 알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가 알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상대가 알면 아군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면 비밀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밀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개될 내용은 비밀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비밀이라고 했으나 내일 다 공개된다면 군 당국의 신뢰는 떨어질 것입니다. 상대의 이용 가능성, 우리의 피해 가능성,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헌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포탄의 비극’에 관한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는 단기적으로는 국익을 해칠지 모르나, 장기적·전략적으로는 국가에 이익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라이 학살 사건’도 처음에는 미군 당국이 공개를 막았으나 결국은 보도가 되었고,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군의 손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전쟁을 끝내는 데 일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민주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거 독재 국가들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배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진실보도가 국가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익을 위해 단기적,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비밀에 대해 종합적, 신중한 판단을 한다면 군과 언론의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위기 시에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